

주간 통일정세

2016-04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이산가족
4.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우리 국회의 4차 핵실험 규탄 결의문 수령 거부(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2일 통일부가 관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 국회의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이번 4차 핵실험 규탄 결의문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우리 국회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과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뒤 북측에 전달해줄 것을 통일부에 의뢰했으나 두 차례 모두 북한이 이를 수령하지 않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지난해 남북교역 최고치 경신...개성공단이 99% 차지(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1일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인용하여 2015년 남북 교역액이 27억 1천 349만 달러로, 종전 최고치인 2014년 23억 4천 312만 달러보다 15.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 금액이 11.0% 늘어난 12억 6천 128만 달러, 반입 금액은 20.3% 증가한 14억 5천 222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하면서, 이로써 지금까지 남북교역 누적액은 245억 283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뉴스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가 대부분 차단되면서 개성공단은 남북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 참가 유소년 축구대회도 무산…北 도발 여파(1/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남북 스포츠 교류의 불씨로 기대를 모아 온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여파로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고 18일 보도하면서, 이에 대회를 추진해온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북한팀이 참가하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중국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통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금지 방침에 따라 중단했다”고 밝힘.
 -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4~28일 중국 윈난성(雲南省) 쿤밍(昆明)에서 한국,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8개팀이 참가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열 계획이었고, 2015년 1~2월에도 중국 청두(成都)에서 이 대회를 연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로 군사적인 긴장이 높은 가운데 평양에서 이 대회를 치렀음.
 - 그러나 통일부가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도발로 민간 남북교류와 대북 지원 중단 방침을 세웠고, 결국 일주일 뒤로 예정된 유소년 축구대회도 열리지 못하게 되어 올해 하반기 평양에서 예정된 이 대회의 개최 전망 또한 불투명해지게 됨.

- ‘南 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 망동으로 하여 남북관계는 외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이념을 심장에 새기고 민족 자주통일 위업에 떨쳐나서자’고 선동(1.18,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군의 새해 ‘해상 실탄사격훈련·포사격훈련’과 합참 의장 등 발언(강력 응징) 지속 비난 및 ‘북침을 노린 군사적 도발행위 중단’ 주장(1.20, 중앙방송)
- 韓日 위안부문제 합의 관련 “정치적 흥정물”이라며 ‘친일매국역적들에 의해 조작된 굴욕적인 합의를 백지화하고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나가야 한다’고 선동(1.21, 중앙방송)

- 現 정세에서 “평화로운 환경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라며 ‘미국의 反北 고립압살 책동에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강조(1.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남한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시위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등을 거론하며 ‘최근 남조선에서 정치적 갈등이 극도에 달하고 사회 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면서 민심의 분노는 도처에서 폭발하고 있다’며 ‘남조선 사회의 현 위기는 사대매국 정치에 의해 초래된 필연적 결과’라고 비난(1.24,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서 조선의 지위 단번에 바뀌어”(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세계는 보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정론에서 “(핵실험을 통해) 크지 않은 나라이며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인류 최강의 힘을 쥐고 나섰다”며 “조선의 지위가 단번에 바뀌었다”고 보도함.
 - 이어 “(미국 등은) 악의축과 핵포기를 떠들어대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침략전쟁에 끈질기게 매달리던 것으로부터 그것의 총파산을 공인하고 열강들의 전열에 조선의 자리를 내여주고 새로운 질서와 힘의 구도에 줄을 맞추는 자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악의에 찬 중상과 으르렁대는 제재소동, 매일 같은 의사표명, 분주스러운 쑥덕공론으로 또다시 세계는 소란하다”며 “그러나 새로운 강국의 출현은 언제나 진동을 동반하는 법”이라고 언급하였고, “미국에 추종했던 모든 나라의 방향 전환이 잇따르고 유엔은 수없이 반복해온 제재 결의와 압박 공조를 역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하는 자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힘을 지닌 우리의 비약은 메가톤급의 속력으로 세계의 눈을 끌고 있다”면서 “수소탄은 강국의 억년반석, 문명부흥은 그 위에 꽃피울 우리의 꿈”이라며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거듭 내세움.

- 조선신보 “北핵실험, 6자회담 새로운 힘겨루기 양상”(1/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3일 ‘수소탄 시험, 6자 구도 안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자회담이 중단되어 8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참가국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양상을 띠며 벌어지고 있다”며 “조선(북한)의 수소탄 시험이 그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도함.
 - 신문은 “미국은 조선의 수소탄 시험을 미, 일, 남조선(남한)의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 패권을 노린 재균형정책을 합리화하는 또 하나의 구실로 삼았다”면서 “군사팽창을 노리는 일본도 북남 합의를 깨고 동족 대결로 회귀하려는 남조선 당국도 저저마다 수소탄시험을 리용(이용)하였다”고 언급함.
 - 이어 신문은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한 포위망 형성과 군사적 압박은 실제로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들 나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 압박 노선을 반대하고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언사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분석함.
 -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소동이 문제 해결의 방도로 될 수 없음은 력사(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조선의 제안에 화답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조선반도(한반도)의 안전 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되고 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된다”고 덧붙임.

- 북한 “美, 푸에블로호 사건서 교훈 찾아야”…대미 비난(1/23,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발생 48주년을 언급하면서 “우리 공화국은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핵 강국의 전열(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상대해 줄 그런 힘이 있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은 력사(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고집하면서 무분별한 침략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또다시 걸어온다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침략자들을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최후멸망의 무덤 속에 들여보내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함.
 - 미국 해군소속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의 원산 앞바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북한 해군에 피랍됐다고 연합뉴스가 덧붙임.

- 北 “대북 제재책동 악랄, 먹는문제 자체 해결해야”(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천만 가지 국사 중의 제일 국사’란 글에서 “오늘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봉쇄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거세게 비난함.
 -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 제일 국사’로 내세웠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농축수산 부문의 혁신, 경공업 부문의 현대화 및 과학화, 건설 부문의 총공격전 등을 적극 이행하자고 촉구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美대학생 관광객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체포(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인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체포한 인물은)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학 학생 왓 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라고 보도함.
 - 통신은 “(그가) 미국 정부의 묵인, 조종 밑에 조선(북한)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어떤 ‘적대행위’를 했는지, 언제 체포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 “북한 억류 美대학생, 호텔서 발생한 사건이 구금 이유”(1/24, AP통신)
 - 최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은 그가 묵었던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구금됐다고 A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는 자사 고객인 오토 워비어(21)가 '호텔 사건'으로 억류됐다고 밝혔으며 “워비어가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묵었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유엔, '北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핵실험 경고 메시지”(1/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 유엔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유엔이 1월 말께 시행 예정이던 북한 외교관 초청 군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을 연기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군축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해오던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1~2달 동안 북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유엔이나 제네바 유엔 군축연구소, 관련 회원국 등을 돌며 시행해오던 연수프로그램은 일단 무기한 연기됐고 올해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유엔주재 미국 대사 “대북 제재, 중국과 합의 접근 못했다”(1/24, 연합뉴스)
 -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두고 미국이 추진 중인 중인 제재안과 관련해 아직 중국과 합의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앞서 18일 익명의 미국 관리는 안보리 회원국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강경하고, 종합적이며, 신뢰할만한 일련의 새로운 제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소개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뉴스는 덧붙임.

자. 기타 국가

- 프랑스 AFP통신 올해 평양에 지국 개설…“국제네트워크 확대”(1/19, AFP통신)
 - 프랑스 AFP 통신은 엠마누엘 어그 AFP통신 회장과 림호룡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 부사장이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AFP 평양 지국 개설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 이에 어그 AFP통신 회장은 “AFP가 가까운 장래에 평양에 지국을 설치하면 AFP의 국제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AFP통신이 특히 이미지를 통해 가능한 한 충실하게 뉴스를 전달한다는 임무를 달성하려면 전세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선노동당 중앙위, 1월 18일 라오스인민혁명당 제10차 대회 앞으로 축전(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제40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램경연 아시아지역 예선경연(2015. 11.18~11.22)에서 우승컵과 2개의 금상, 2개의 속도상을 쟁취하여 ‘세계결승경연 참가자격’ 획득(1.18, 중앙통신)
- ‘우리(北)는 민족의 자주권에 도전하는 침략세력들을 정의의 힘으로 징벌할 수 있는 핵 강국이 되었다’며 ‘이제는 미국이 주체의 핵 강국 앞에 무색해진 아메리카 제국의 신세를 한탄하며 굴욕과 낙망의 눈물을 닦을 차례가 되었다’고 주장(1.19,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무기 수입 증가와 매년 방위예산 증가를 거론하며 ‘과거 최악에 사죄조차 하지 않으면서 군사대국화 책동에만 열을 올리는 일본이 또다시 해외 침략의 길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1.19,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노동당 중앙총, 1월 20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총에 ‘베트남 공산당 제12차 대회’ 관련 연대성 축전(1.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수소탄 실험 관련 ‘공화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전략적 필요에 따른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반공화국 제재결의 조작이요, 군사적 대응조치요 하는 적대행위들과 도발행위들을 저지른다면 필연코 불꽃이 튀게 할 것’이라고 재차 위협(1.21, 평양방송)
- 일본 정객들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이전’ 등 발언 관련 ‘침략 역사를 덮어버리고 과거청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난하며 ‘반인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고 주장(1.21, 중앙통신·노동신문)

-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회(평통협) 회의, 1월 20일 남승우(총련 부의장)·리동제(재일 조선인 평화통일협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진행하고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 관한 결정서’ 채택(1.22, 중앙통신)
- 미국의 남한에서 무력증강·군사훈련 등 “제국주의 침략정책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에서 전쟁범죄 행위 종식’을 주장(1.23, 중앙통신)
- ‘오늘 우리(北)가 강성해지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봉쇄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1.24, 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공포정치’ 접고 ‘스킨십 리더십’ 내세우나(1/1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리발사(이발사)들과 허물없이 대화도 나누시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의 문화오락시설 ‘강성원’ 2층의 이발소를 방문한 일화를 뒤늦게 소개함.
 - 매체에 따르면 당시 김 제1위원장은 여성 이발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누가(내) 머리를 깎아주겠는가”라고 깜짝 제안했으며, 이에 매체는 “(김 제1위원장은 이곳의 이발사들이 당황해 하자) 한번 꼭 시간을 내서 머리 깎으러 오겠다고 했다”면서 “그 말씀에 리발실에는 한 가정, 한 식솔의 정이 한껏 넘쳐났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함.
 - 이어 “다음해 원수님(김정은)께서는 강성원을 또다시 찾으시여 약속하신 대로 리발실에도 들리시였다”면서 “그이(김정은)께서 지켜보시는 속에서 동행한 여러 일꾼(일꾼)들이 강성원 리발사들로부터 머리를 깎게 되었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청년운동사적관 시찰…최종해 3개월만에 수행(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설된 청년 운동사적관을 현지지도했다고 2일 보도하면서, 이에 김 제1위원장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면서 “청년운동사 적관에는 김일성-김정일 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어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문제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내세웠다”며 “(이들의) 현명한 영도와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연대들을 영웅적 위훈과 자랑스러운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청년들 속에 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입상을 색조각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입상을 보면 청년사업을 중시하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온 수령님들의 위대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시실들의 백두산 철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은 혁명의 만년재보, 국보 중의 국보이기 때문에, 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자면 강사들 대열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적관 관리운영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지시함.
 - 통신은 이날 현지지도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밝힘.
- “나도 진찰해주렴”…北매체, 김정은 ‘스킨십 정치’ 연일 보도(1/2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2일 ‘꼬마의사의 재롱도 받아주시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7월 평양 경상유치원을 방문한 사연을 뒤늦게 소개함.
 - 김 제1위원장은 당시 이 유치원의 중앙홀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본 뒤 종합놀이실에 꾸며진 ‘병원놀이칸’에 도착하였으며, 병원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자신의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어디가 아픈지 나도 한번 진찰해주렴”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고 매체는 전함.
 - 그러면서 매체는 “한 나라의 영도자이기 전에 어린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자애로운 그 모습은 동서고금에 있어본 적이 없는 불멸의 화폭이었다”라고 찬양함.
 - 김정은, 체육인 종합식료공장 시찰…최룡해·김여정 수행(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설된 ‘금척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2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1월에 이어 1년 만에 이 공장을 찾아 “공장의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었다”면서 “공장 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 고도로 집약화된 생산공정들을 꾸려놓은 것”이라고 말했으며, “생산공정들마다에서 우리의 식료품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면서 “체육인들의 영양관리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식료품들과 인민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들을 대량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치하함.
- 이어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 현대화된 결과 우리의 식료공업을 더 높은 단계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 기준이 마련되었다”며 “중앙과 지방의 식료공장들과 련관(연관) 부문의 일군(일꾼)들을 참관시키고 따라 배우게 하자”고 덧붙임.
 - 통신은 이날 시찰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안정수 당 경공업부 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함께 수행했다고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김영철, 김양건 후임 확실하다…대남 비서까지 물려받아”(1/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 김영철(70) 정찰총국장이 작년 말 사망한 김양건의 뒤를 이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물론 대남담당 비서직까지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20일 보도함.
 - 소식통은 “김영철이 김양건의 후임으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로 임명됐다면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의 국장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임.
- “北김정은 고모 김경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도 상실 확인”(1/20,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김경희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빠졌다고 20일 보도하면서, 일본의 해외정보 청취·분석기관인 라디오프레스를 인용하여 김경희가 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재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청년운동사적관 개관…최룡해 연설(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청년운동사적관 개관식이 21일 열렸다고 보도하면서, “청년운동사적관은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청년강국건설의 자랑찬 역사를 펼치시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

하신 백두산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청년운동영도 업적을 전하는 위인칭송의 대기념비”라고 소개함.

- 통신은 이날 개관식에 김기남·최룡해 당 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수길 평양시 당 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최룡해 비서가 연설에서 “모두가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의 침로 따라 폭풍쳐 내달림으로써 당이 안겨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 청년강국의 주인으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가자”고 말했음을 전함.

■ 北 “김정은 신년사 관철하자”…내각 전원회의 열어(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과업 관철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박봉주 내각 총리와 내각 구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고 밝힘.
- 이어 통신은 “회의에서는 올해 내각 앞에 나선 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전례없는 생산성 과를 이룩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자고 결의를 다졌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김정은 ‘첫 수소탄 발언’ 평천혁명사적지 띄우기(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으로 대경사를 맞이한 격동적인 시기에 인민군 군인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나라 군수공업의 역사가 시작된 평천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참관자들이 “현대적인 무기를 생산하게 됐음을 장엄하게 선언한 총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한” 기관단총 사격장과 “주체적인 병기공업의 창설”을 알리는 현지도 표식비 등을 감명 깊게 돌아봤다고 전함.
 - 그러면서 “참관자들은 평천벌에서 울려 퍼진 자립적 국방공업 창설의 총소리를 정의의 폭음, 핵보유국의 뇌성으로 높이 울린 장군님과 원수님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소개함.
- “닭알에 사상 재우면 바위를 깬다”…北 거듭 ‘사상무장’ 독려(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인민중시, 군대 중시, 청년 중시의 3대 전략은 우리 당의 제일가는 무기이다’라는 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비범한 영도예술에서 정수를 이루는 것은 사상만능론”이라며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명언 중의 명언”이라고 치켜세움.
 - 신문은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접할 때마다 천만 군민은 사상의 힘이 얼마나 위력하고 무한한가를 깊이 절감하고 있다”며 사상 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 전략은 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우리 당의 제일가는 무기”라며 “3대 전략의 중요한 요구는 모든 투쟁 단계에서 인민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하여 사상의 힘으로 만사를 해결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혁명 사상은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북한 사회 전반에 철저한 사상 무장을 요구함.
 - 北, 새 포스터 잇달아 공개하며 ‘자주통일’ 공세(1/18~22, 우리민족끼리)
 - 4차 핵실험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최근 연일 새로운 ‘선전화’ (포스터)를 공개하며 ‘자주통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민족끼리는 18~21일 매일 한 개씩 자주통일을 주제로 하는 선전화를 공개함.
 - 매체가 공개한 각각의 선전화에는 주민들이나 붉은 깃발 등을 배경으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음.

- 이에 매체는 “지난 한해는 우리 민족의 통일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북남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을 기도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현실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실 때만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北매체 “외부 지원 없어도 좋아”…또 중국 겨냥?(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자력자강에 존엄도 부흥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기의 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다”라며 “외부의 지원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언급함.
- 신문은 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나선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남에 대한 환상, 외세 의존만큼 유해롭고 위험한 것은 없다”고 주장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17일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노동자·기술자·일꾼들에게 축하전문 전달(1.18, 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제6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월 18일 전용남(청년 동맹 위원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18, 중앙통신)
- 정주혁명사적관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1월 17일 강성철(정주시당 책임비서, 기념보 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18,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19일 100세 생일을 맞은 김소제(女, 자강도 성간군 거주)에게 생일상 전달(1.19, 중앙통신)
-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평천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보도(1.19,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들(조철주, 은하피복공장 지배인 등)에게 ‘감사’ 전달(1.20, 중앙방송)
-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은 김정은 영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임무와 전투적 역할을 다해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고 호소(1.2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당이 밝힌 3대전략(인민·군대·청년중시)은 혁명위업 수행에서 근로인민과 혁명군대, 청년 대오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는 전략’이라며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담보하는 필승의 무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1.21, 중앙통신·노동 신문·중앙방송)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1월 21일 차승수(기자동맹 중앙위원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22, 중앙방송)
-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 1.14~21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및 맹세모임(삼 지연 대기념비 앞에서) 진행(1.21, 중앙통신)
- 北, 지난 2년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등 940여개 단위에서 마두산혁 명전적지를 찾았다 선전(1.21,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남도 농업부문사업(물길공사장과 해주뜨락또르(트랙터) 부속품공장 등) 농사차비 실태 현지요해(1.22, 중앙통신)
- ‘자강의 길만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정의와 승리의 길’이라며 ‘자력자강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부흥도 있다’고 주장(1.22,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 위인들의 혁명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4, 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1.6 발표), 백두산영웅청년 1호·2호 발전소 건설에 공을 세운 일꾼·청년돌격대 지휘관·대원들·건설자들과 연관 단위 일꾼·과학자·기술 자·노동계급들 표창(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70번째 생일을 맞은 리태형(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인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과 80번째 생일을 맞은 리경주(리계순사리원 제1사범대학 연구사인 박사 부교수)에게 생일상 전달(1.24, 중앙통신)
- ‘지난해 최고 생산년도보다 수만의 시멘트를 증산한 상원노동계급의 성과는 조선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질의 뚜렷한 과시’라며 ‘전체 노동계급은 상원노동계급처럼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돌격, 총매진 하자’고 호소(1.24,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김정은 신년사 받들자”…간척·발전소 건설 박차(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룡매도 간척지 4구역 건설이 시작되었다”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건설자들은 맏잔 바다바람과 강추위속에서도 그날 계획을 그날로 넘쳐 수행하기 위해 힘찬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룡매도 간척지 4구역 건설이 수백만㎡의 토양을 처리하고 수십 리에 달하는 방조제 공사와 30여만㎡의 장식 공사, 9천여㎡의 콘크리트 치기를 비롯해 방대한 건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라고 설명하였으며, “(공사가 끝나면) 두개의 큰 농장 농경지와 맞먹는 새땅이 생겨나 많은 알곡이 생산되게 된다”고 덧붙임.

나. 주요 조치

- 북한, 김정은 지시에 화장품 개발도 ‘속도전’(1/1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8일 “(지난해) 평양화장품공장이 기능성화장품, 머리칼화

장품, 세척용화장품, 분장용화장품 등 23종의 38점에 달하는 화장품들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어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역량에 철저히 의거해 80여 가지 화장품들을 인민의 기호와 특성 취미뿐 아니라 사용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분류했으며, 제품규격을 과학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모든 화장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은하수화장품을 세계적인 제품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명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일꾼들은 당 제7차 대회 전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끝내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고 줄기차게 내밀고 있다”고 보도함.

■ 北, 외국투자기업 대상 보험상품 홍보…“생명·재산 보호”(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의 국영 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경제개발구에서의 보험사업’이라는 글에서 “총회사에서는 경제개발구들에서의 외국 투자기업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재보험과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3자배상 책임보험, 건설 3자배상 책임보험 등을 예로 들었다고 보도함.
- 회사측은 이 외에도 “개인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제개발구들에서 날로 늘어나는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험 업종들을 개발 도입하고 국제적 보험추세에 맞는 보험 업종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보험 보상의 신속성을 보장해 외국기업들 속에서 신용 있는 회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디지털 지질지도 ‘금수강산’ 개발…“지하수 탐사 활용”(1/15, 평양타임스 1/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평양타임스의 15일자 보도를 인용하여 “리명철이 이끄는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부 연구팀이 ‘금수강산’을 개발”한 것이 20일에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 평양타임스는 금수강산이 북한의 자체 운영체제(OS)인 붉은별을 비롯해 리눅스와 윈도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도 조치는 물론 편집도 가능하다고 전했고, 세계적인 지리정보 소프트웨어인 아크GIS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신문은 개발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C++를 이용해 고유의 인터페이스 환경도 구축했으며, 지하 지질구조를 자동으로 3D 이미지로 보여 주는 기능도 탑재했다고 선전했고, 이에 개발자들이 금수강산을 활용하면 지하 수 탐사시 시추 횟수가 과거보다 약 8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임.

다. 경제 상황

- 北매체 “작년 발명 건수, 전년보다 111% 증가”(1/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지난 한해 동안에만도 인민경제의 현대화, 국산화 실현에 의의가 큰 발명건수는 그 전해에 비해 111%나 증가되었다”고 보도하며,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우리 식의 분산형 조종체계가 연구완성되어 이 분야에서 제일이라고 뽑내던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자랑함.
 - 통신은 이어 3차원 인쇄기(3D 프린터),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인 나선식 뇌CT 설비, 인체와 토양 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21세기 생물농약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고, 농업 분야에서 사료작물인 ‘애국풀’, 전복의 대량양식기술 등을 ‘첨단과학연구성과’로 거론했으며, 18개월이 걸리는 지하철 설계 공정도 6개월 만에 끝냈다고 선전함.
 - 이에 통신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대진군의 포성을 더욱 기세차게 울리며 부강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반드시 당겨올 것”이라며 올해 성과를 독려함.
- “북한, 정주영 ‘소떼 방북’ 트럭 100여대 아직 사용”(1/2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1998년 6월과 10월 남한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1천1마리의 소와 함께 북에 두고 온 남한 트럭들이 북한 전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면서 “트럭들은 (남한) 자동차회사 마크를 떼어낸 채 북한 전역의 각 기업소에 분산되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어 “남한이나 선진국 등에서는 아무리 차량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생산된 지 18년이 된 트럭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중국의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에서도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비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함.

- 소식통은 또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정비 부품은 아마도 개성공단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의 북한 관리들이 남한의 기업들에 요청하면 자동차 부품 정도는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북한에서는 20년 넘은 일제 트럭이나 중장비들이 여전히 사용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가져온 남한 트럭은 아직도 제 기능을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 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 작년 곡물생산량, 가뭄으로 전년보다 6% 감소(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015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가뭄 등으로 전년보다 6%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21일 농촌진흥청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의 2015년 곡물 총 생산량이 450만t으로, 2014년(480만t)보다 6.3%(30만t) 줄어들었으며 작물별로는 쌀이 202만t으로 6%, 옥수수가 164만t으로 5%, 감자는 50만t으로 10% 정도 줄었고, 보리와 콩 등 잡곡이 각각 6%와 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함.
- 북 해산물 수출 막혀 외화난(1/2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근 해산물 수출이 막힌 까닭에 북한의 외화난이 심해져, 북한의 장마당들에서 해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겨울철을 맞으며 신선한 도루묵은 kg당 중국인민폐 2위안으로 값이 내렸다”며 “1등급에 속하는 길이 30센치 정도의 임연수 한패는 장마당에서 중국인민폐 6위안을 부른다”고 전하면서, 2015년 1월 북한에서 도루묵 1kg의 가격은 중국인민폐 6위안, 명태와 임연수는 각각 중국인민폐 12위안이었는데 그때에 비해 현재 북한의 장마당에서 해산물 가격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설명함.
 - 또 다른 소식통은 “지금 장마당에 나오는 해산물들은 외화벌이 기관들이 수출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며 “수출용 해산물이 대량으로 장마당에 나온다는 것은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혔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고, 중앙에서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바다 자원과 광물 자원을 수출하고 대신 연유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휘발유와 디젤유의 값이 많이 내린 것도 해산물 가격 하락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함.

- “북한, 핵실험 제재 국면서도 中에 노동자 파견”(1/2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 있다고 22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함.
 -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은 취업비자가 아니라 공무여권을 가지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간의 비자협정에 따라 공무여권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중국에 체류할 수 있어 북한은 일단 노동자들을 공무여권으로 중국에 입국시킨 뒤, 중국 업자들과 담합해 공장에 합숙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함.
 -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선양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대부분 공무여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북한에 수출 원천이 고갈됐기 때문에 외화를 벌기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북한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서는 해외 인력 파견에 빗장을 질러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 근로자들의 위장취업 문제만 제대로 검열해도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南순창고추장 흥내 낸 ‘평양고추장’ 주민사이서 인기”(1/22,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이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대비해 각 공장기업소에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평양시 대동강식품공장에 평양고추장 생산 관련 ‘맛 혁명 일으키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국가로부터의 원료가 공급되지 않아 개인 돈주에 의해 기업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에 소식통은 “평양시 대동강식품공장에서 수소탄 시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의 경제봉쇄가 가해질 것에 대비해 자립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종업원 학습이 있었다”며 “수소탄으로 세계를 진감시킨 것처럼 평양 고추장 생산에서 맛 혁명을 일으키라는 공장 당조직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식품공장에서는 평양 쌀 고추장을 전통과 선진기술을 잘 배합하여 최고의 발효식품으로 생산하라는 지시대로 1월 생산에 들어갔다”면서 “고추장 생산의 주 원료인 쌀을 비롯한 고추, 기름, 물엿 등 포장 용기 자재는 (당)위에 손 내밀지 말고 자체로 머리를 짜내어 생산하라고 포치(지시)됐다”고 소개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 중국서 사료용 대두박 대량 수입(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무역 소식통을 인용하여 “요즈음 조선으로 들어가는 물량 중 단일 품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용 대두박”이라며 “그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에 2016년 새해 들어 사료용 대두박을 실은 20톤 대형 화물차가 하루 평균 10대 이상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와 관련하여 “사료용 대두박은 일반 대두박에 비해 가격이 크게 높다”면서 “조선에서 사료용 대두박을 수입하는 것은 이를 가공해 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로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함.

- WHO “북한, 20년 간 소아마비 발생 없어”(1/2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샬라 샤마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 지역사무소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에서는 1996년에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소아마비 환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21일 보도함.
 - 방송은 WHO가 북한에 소아마비 예방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마비 근절 계획’을 실행 중인 북한 당국도 지난 5년간 주민 99%에 경구용 소아마비 예방약을 제공했다고 밝히며, 이에 샤마 대변인이 “북한은 지난해 4월 유엔으로부터 처음으로 ‘불활성 소아마비 예방약’을 지원받아 주민들에게 접종했다”며 “오는 4월부터는 경구용 백신 대신 백신 접종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음을 전함.

- “러시아, 北 나진-하산 구간과 연결되는 철로 확충”(1/2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러시아 철도 전문지 ‘구독’을 인용하여, 러시아 극동철도청이 늘어나는 북한과의 철도 물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구간과 연결되는 바라놉스키-하산 구간의 철로를 확충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함.
 - 이에 철도청 관계자는 “길이 238km인 바라놉스키-하산 철로를 단선에서 복선으로 확충하는 중”이라며 “이는 나진과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의 물동량을 증진하기 위해 이 구간에 연결되는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1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18, 중앙통신)
-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용매도간석지 4구역건설 시작(1.18, 중앙방송)
- 자강도,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105%로 넘쳐 수행하고 있다고 선전(1.18, 중앙방송)
- 농업과학원 강냉이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 1월 18일 계영삼(농업과학원장, 기념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19, 중앙방송)
-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석탄 증산에 주력(1.19, 중앙방송)
- 청년 학생들의 과학기술성과 전시회(1.13, '청년동맹' 창립 70주년 기념 개막), 1월 2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김승두(교육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표창장 시상' 등 폐막식 진행(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지난해 상반기 계획 6월말까지 103.2% 초과 완수 등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시멘트 생산에서 최고생산 연도 수준 돌파" 선전(1.20, 중앙방송·중앙통신)
- 北,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공사 실적이 90%계선을 돌파하는 성과 이룩(1.21, 중앙방송)
- 경공업성의 일꾼들, 인민소비품 생산에 주력(1.22,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올해 4월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시행(1/1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김성일 국장이 신문과의 문답에서 “지난 3년 남짓한 기간 11년제 의무교육제로부터 12년제 의무교육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인 관심 속에 추진돼 지금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그러면서 김 국장은 “올해 새 학년도를 맞는 4월1일부터 나라의 전 지역들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맞게 교육의 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그는 “지난 한해 모든 교종의 교과서 집필 편찬이 완료되고 올해 2016~2017학년도 교육 사업에 이용될 교과서 보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며 “새 교과서 내용에 맞게 교원에 대한 재교육과 교수 강습이 전국적 규모에서 진행돼 교육자의 자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전국적으로 1천여동의 교사 건설과 증축공사가 완공돼 7천여개 교실이 새로 꾸려졌다”고 밝힘.

- 北, 문화예술인에 ‘명작창작’ 독려…“모란봉악단 본받아야”(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자 신문 4면에 문학, 영화, 연극 등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제7차 당 대회 전까지 ‘명작’을 많이 창작할 것을 독려하는 기사를 4쪽지나 실으면서 이들의 분발을 촉구함.
 - 신문은 문화예술인들의 임무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작 창작”이라며 “당 제7차 대회를 전례 없는 명작 창작 성과로 맞이하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창작 돌격 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주문함.
 - 그러면서 신문은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창조 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뜻깊은 올해에 혁명의 포성을 높이 울리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北, 대북방송 영향 탈북 늘까 겁났나? “주민회의 긴급 소집”(1/21, 데일리NK)
 - 데일리NK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남한의 방송에 현혹돼 탈북하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인민반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함.
 - 이와 관련하여 양강도 소식통은 “양강도는 군사분계선(DMZ) 지역이 아니어서 한국의 방송이 이곳까지 들리지 않는데 당국이 이런 회의를 한 것은 아마도 한국방송을 접한 남쪽 지역 주민들을 통해 자본주의 사상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또 “최근 퇴비 전투동원과 7차 당대회 관련 각종 행사 등으로 정신없는 우리에게 한국에서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꼴만 됐다고 비아냥거리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우리 보고 탈북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도망가지 않게끔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만들면 될 것 아니냐’며 ‘숨막히는 생활이 지속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탈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10대 15명, 美영화 시청 죄목으로 공개재판 받아”(1/21,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1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근 양강도에서 미국 영화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5, 6학년 학생 15명이 공개재판을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비사회주의 문화에 물들어 학생들에게 이를 유포시켰다는 죄가 씌워져 재판 후 도(道) 인민보안국에 넘겨졌다고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시범잼(본보기)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주민들을 총살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CD와 관련한 사건은 잠잠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영화를 본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한창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한국영화가 아니니까 망심을 하고 돌려보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덧붙임.

마. 사회 동향

- 북, 학업 포기하는 학생 늘어(1/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의 학교가 국가의 지원 없이 학교운영과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보도함.
 - 소식통은 “중양에서 말로는 무상교육이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학교꾸리기와 난방과 같은 학교운영 경비가 모두 학생들 자체부담으로 해결되고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 측의 과제 독촉에 방학기간에도 땀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는 형편”이라고 전함.
 - 특히 소식통은 새해 들어 “학교운영비와 화목(땀감), 각종 사회지원금은 한 학생 당 평균 매월 2만 원(북한돈)까지 올랐다”며 “청진시 송평구역 초급중학교의 경우, 학생 1명당 화목과제가 1입방(미터)이나 되는데 이는 1미터 노끈으로 묶은 길이 60cm의 나무단 30개에 해당하는 양이며 화목 1입방 당 시장가는 인민폐 150위안(북한돈 19만5천 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 로임(월급 5천원)으로 계산해도 거의 3년 치에 맞먹어 아예 학교 가기를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북한, 아시아축구연맹 U-23 선수권 8강 진출(1/1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1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2016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축구선수권대회 B조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과 2-2로 비겼다고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B조에 속한 4개 팀 가운데 일본이 3승, 승점 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세 나라가 모두 2무1패 승점 2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지만, 북한이 다득점에서 앞서 8강 진출권을 획득함.

- 제42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1월 21일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1.21, 중앙통신·평양방송)
- 평양시 안의 급양봉사부문 메기요리경연, 1.20~21 40개 단위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면옥에서 진행(1.21, 중앙통신)
- 올해 2월 16일과 4월 15일 제24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과 국제육상연맹-제28차 만경대상 마라톤 경기대회 등 '2016년에 진행될 국제·국내 체육축전 및 경기' 소개(1.23, 중앙통신)
- 北, 개성시에 '모범 체육시' 칭호 수여(1.24, 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아직 핵탄두 소형화 성공못해...핵-미사일 추가실험 필요(1/21, 연합뉴스)
 - 북한은 아직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성공하려면 핵과 미사일의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의 공식 보고서가 나옴.
 -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5일 북미관계 보고서에서 “미 정보 당국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을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충분히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정보국(DNI)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아직 핵 탑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힘.
 - 보고서는 이어 “아마도 (현 시점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임박한 위협은 한반도 전역과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노동 미사일일 것”이라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게이츠 전 미 국방, 북한, 결국 SLBM기술 얻을 것(1/21, 연합뉴스)
 - 북한이 결국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기술을 획득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우려함.
 - 게이츠 전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정책연구기관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북한이 SLBM 기술을 획득하려 노력하고 있고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얻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그러나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의 SLBM 기술 수준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게이츠 전 장관은 “그가 위험할 뿐 아니라 멍청하다(stupid)는 게 내 걱정”이라고 언급함.

- 미국무부, 5자회담 제안에 ‘비핵화 책임 북한에’(1/2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북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함.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복귀하도록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와 도발 자체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 미 국무부가 이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미 정부 내에선 그동안 기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 이외 나머지 5개국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

나. 미·북 관계

- 북한 견제?...세계최강 美 F-22 전투기 8대 일본 뒀다(1/22, 연합뉴스)
 -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F-22 전투기 8대가 지난 20일 주일 미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横田)기지에 날아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함.
 - 아사히는 F-22의 일본 전개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견제하고 대만 총통 선거후의 양안정세를 고려해 미군의 역지력을 과시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주일미군사령부 측은 “22일까지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것으로 전부터 계획돼 있던 훈련”이라고 설명하며, 사령부측은 이 기간 F-22외에 F-16도 여러대 비행해 올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F-22가 8대나 비행해온 것은 드문 일”이라고 언급함.
- 미국, 북한과 원유 광물거래 금지 등 초강력 제재 검토(1/22, 연합뉴스)
 -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결의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중국 등 관련국에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원유 수출 외에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자원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의 유일한 민간항공사 고려항공이 각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전해짐.
 - 교도통신은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만큼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함.

- 갈루치, 북한, 이란처럼 강하게 제재해야(1/22, 연합뉴스)
 -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북핵문제 토론회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와 관련, 이란에 대해 취했던 조치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과 핵 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 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제재"라면서 "지금의 대북 제재는 대(對)이란 제재만큼 강하지 않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결국 첫 번째 '협상', 두 번째 '합의'라는 이란의 선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음.
 -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중국 변수'를 거론,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무릎을 꿇거나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라"면서 "중국이 우리와 (전략적으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지만, 결코 똑같은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질 정도로 심하게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음.

- 북한, 美, 푸에블로호 사건서 교훈 찾아야...대미 비난(1/23, 연합뉴스)
 - 북한은 1968년 발생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48주년을 맞아 미국은 이 사건에서 교훈을 찾으라며 대미 비난 공세를 하였음.
 -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발생 48주년을 언급하면서 "우리 공화국은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핵 강국의 전열(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상대해 줄 그런 힘이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은 력사(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고집하면서 무분별한 침략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또다시 걸어온다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침략자들을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최후멸망의 무덤 속에 들여보내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함.

- 미군 전략사령관, 북한 대응위해 미사일방어능력 중요(1/23, 연합뉴스)
 -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능력도 미국의 전략적 억지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이 지적함.

- 헤이니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략 역지력에 포함되는 미사일방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려 했다.”고 언급한 뒤 그 이유로 북한의 핵개발을 거론함.
-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 여부와 관련해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실험을 했다는 점은 알고 있고, 우리는 북한과 그 지도부가 그 방향(핵개발)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바에 대응하기 위해 그런 종류의 능력(미사일방어)을 갖추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음.

■ 북한, ‘반공화국 적대행위’ 미국인 체포(1/24, 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해당 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체포한 인물은) 미국 버지니아종합대학 학생 왓 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라고 보도함.
- 통신은 “(그가) 미국 정부의 목인, 조종 밑에 조선(북한)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음.
- 조선중앙통신은 워비어가 어떤 ‘적대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여행사 측은 “워비어가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묵었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다. 중·북 관계

■ 주일中대사, 북핵실험 유엔결의 위반…유엔 대응 지지(1/20, 연합뉴스)

-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하는 대북제재 강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청융화 대사는 지난 19일 도쿄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명확하게 (유엔의) 관련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그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함. 그러면서 청 대사는 “유엔의 제재결의는 북한의 비핵화, 핵확산 방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선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중국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 만큼 청 대사의 이런 발언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높이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아사히는 평가함.

라. 일·북 관계

- **日전문가, 북한 자산동결 확대하면 핵 포기 이어질 것(1/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추진 중인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빈틈없이 대응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제기됨.
 - 2013~2015년 안보리 이란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구성원이었던 스즈키 가즈토(鈴木一人) 일본 홋카이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8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자산을 동결하는 북한의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면 “핵 포기 이어지는 제재로서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면 “북한에 한층 자금이 유입되지 않게 된다. 수입품 대금을 내는 것이 어려워져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로 매우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전망했음.
- **日정부, 북한,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배제 못해(1/1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9일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민주당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이 제출한 질문서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만들어 이날 각료회의에서 채택했다고 NHK가 전했다.
 - 답변서에서 정부는 “북한이 매우 폐쇄적인 체제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지난 6일 핵실험을 포함한 일련의 북한의 언동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힘.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北 나진-하산 구간과 연결되는 철로 확충(1/22, 연합뉴스)
 - 러시아가 늘어나는 북한과의 철도 물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로를 확충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방송은 러시아 극동철도청이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구간과 연결되는 바라놉스키-하산 구간의 철로를 확충하고 있다고 러시아 철도 전문지 ‘구독’을 인용해 전했다.
 - 철도청 관계자는 “길이 238km인 바라놉스키-하산 철로를 단선에서 복선으로 확충하는 중”이라며 “이는 나진과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의 물동량을 증진하기 위해 이 구간에 연결되는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바. 기타

- 다루스만, 北인권 개선 안하면 김정은 형사 책임 추궁해야(1/22,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나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을 22일 표명함.
 - 교도통신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방문 중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도쿄도(東京都) 소재 유엔대학 강연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북한 지도자의 형사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김 제1위원장의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규정했으나 “인권 침해를 막는 조치를 조속하기 취하지 않으면 김정은 본인도 책임을 추궁 받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블링큰, 北 핵실험에 강력대응 필요…한민구 장관 면담(1/20,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우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민구 장관의 시각을 공유한다.”고 밝힘.
 - 한 장관은 블링큰 부장관을 맞이하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반도와 세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미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협의할 시점”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블링큰 부장관은 “한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금 한미동맹은 내가 겪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함.
- 미국 CSIS,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지역MD 강화(1/21, 연합뉴스)
 -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로 권고함.
 - CSIS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함.
 - 한미일, 이르면 내달 합참의장회담…북핵·방위협력 논의(1/2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르면 다음달 3국 합참의장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보도함.
 -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3국 공동훈련 등 방위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함.
 - 한미일은 앞서 지난 16일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율함. 세 나라는 현재 개최국과 개최 일정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회담 정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하였음.

- 美육군, 이달 말 기갑여단 4천500명 한국 순환배치(1/21, 연합뉴스)
 - 미국 육군이 이달 말 텍사스 주 포트후드 제1기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 전투팀 소속 4천500여 명의 병력을 한국에 파병함.
 - 미국 국방부는 오는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텍사스 주 포트 후드 기지의 쿠파 운동장에서 공식 파병행사를 갖는다고 밝힘. 이는 주한미군 지원을 위한 두 번째 순환 배치라고 미 국방부는 밝혔음.
 - ‘철마여단’으로 불리는 이 전투팀은 지난해 6월 한국에 파견된 ‘블랙잭 여단’을 교체해 9개월간 머물 예정임.

- 美상원 동아태소위원, 한국방어 상호이익, 트럼프는 잘 봐야(1/22, 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동맹의 ‘안보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는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 가드너 의원은 미 상원 러셀 빌딩 내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한국 공짜 방어’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훌륭한 동맹을 방어하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고 밝힘.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좀 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함.
 - 한편,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을 방어해 주고 있지만 얻는 것이 없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군 주둔비용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언급을 일삼아왔음.

나. 한·중 관계

- 한중일 FTA 9차협상…자유회방식·협정범위 집중 논의(1/18, 연합뉴스)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수석대표협상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림. 1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는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가오옌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참석함.
 -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달 일본 하코네에서 열린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 등 주요 분야의 시장 자유화 방식과 협정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 이와 관련,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에 따라 협상을 벌이고 있음.
- 中, 한반도 문제, 지엽·근본 문제 함께 다스려야(1/18,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담화에서 “우리가 내놓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대 우리의 핵시험중지 제안과 평화협정체결 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힌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종합적인 시책으로 각국이 냉정하게 현재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홍 대변인은 이어 “각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큰 방향을 견지하고 합리적으로 각자(당사국들)의 관심과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항구적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음.
 - 한편, 홍 대변인의 ‘각자의 관심과 우려의 합리적 해결’이란 표현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줌으로써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설 근원적 동기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때 중국이 자주 쓰는 표현임.
- 中, 6자회담 조속히 재개해야…한국의 ‘무용론’ 제기 일축(1/22, 연합뉴스)
 -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6자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거론한데 대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한다.”고 밝힘.
 - 중국이 한국에서 ‘6자 회담’ 무용론이 제기되자마자 이에 대해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발표한 것은 ‘6자 회담’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반도(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또 “우리는 관련 각방(각 국가들)이 9·19 공동 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불변(1/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음. 당시 성명은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음.
- 일본인 60%, 위안부 軍관여·정부책임 인정한건 잘한 일(1/18, 연합뉴스)
 - 일본인 60%가 한일 군위안부 합의를 통해 자국 군의 관여 사실과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 아사히신문이 16~17일 실시해 19일 보도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일본이 군위안부 제도를 둘러싼 ‘군의 관여’와 ‘정부 책임’을 인정하데 대해 60%가 ‘평가한다(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고 답해 ‘평가하지 않는다(23%)’는 답을 크게 웃돌았음.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양국 합의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음.
 -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해서도 ‘평가한다.’는 답이 63%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19%)을 압도했으며, 또 이번 합의가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이 54%였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은 31%로 나타남.

- 기시다 외무상, 박 대통령 용기있는 결단에 경의 표한다(1/19,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한국·일본 정부가 합의한 것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한국의 미래를 응시하며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에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고 19일 말했다.
 - 그는 이날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국내 사정을 짚어진 상태에서의 협의”였다고 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도 큰 결단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특히 곤란한 국내 상황”을 안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언급함.
 -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북한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시야에 넣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규정했으며, “일본 내에서 합의에 대한 엄한 비판이 있다. 그래도 일본인은 세대를 넘어서 과거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성실하게 합의 실현에 나설 것을 확실히 약속한다.”고 강조함.

- 日법원, 위안부가 성노예인지는 진위판단 불가능한 평론(1/20, 연합뉴스)
 -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인지는 진위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평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견해를 내놓음. 도쿄지방법판소는 위안부 문제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가 자신의 책을 거론하며 ‘날조’라는 발언을 한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内文城) 전 중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일 이렇게 판시함.
 - 재판부(하라 가쓰야<原克也> 재판장)는 판결문에서 “종군 위안부(원문 표기)가 성 노예였는지 아닌지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사실에 관해 사용하는 ‘날조’라는 단어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시함.
 - 요시미 교수는 일본군이 전쟁 중 위안소의 설치나 위안부 관리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인물이고, 그가 발견한 문서의 존재는 1992년 1월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쳐 1993년 8월 고노(河野)담화를 발표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음.

- 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 A급전범 합사에 불만(1/21, 연합뉴스)
 - 야스쿠니(靖國)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구속기소)가 야스쿠니 신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함.
 - 전 씨는 일본 경시청公安부의 조사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데 대해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교도는 전함. 일본 경시청公安부는 21일 전 씨에 대해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 그를 재차 체포함.
 - 일본은 1946년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으로 분류된 이들 중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사형수 7명과 옥중 병사자 7명 등 14명을 ‘쇼와 순난자(昭和殉難者)’로 추어올리며 1978년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몰래 합사함.

- 아베, 한국, 전략적 이익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1/22,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그는 이날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가진 올해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과는 작년 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오랜 현안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같이 밝힘. 아베 총리는 2013, 2014년 시정연설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가치 공유’ 부분을 빼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규정했었음.
 - 올해 시정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은 것은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역사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독도는 일본 땅...日 외무상 외교연설서 3년째 되풀이(1/22,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2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함.

- 2014년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이래 3년 연속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연설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함.
 - 올해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말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영토문제의 경우 일본으로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 아베 측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범죄인이라고 단언 못한다(1/2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은 “국내적으로 A급 전범은 범죄인이라고까지 잘라 말하는 것에 상당히 저항이 있다.”고 말했음.
 -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22일 민영 위성방송채널인 BS아사히의 프로그램 녹화 때 도쿄재판 판결문에 관해 “연합국의 스토리(이야기)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음.
 - 도쿄재판은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을 교수형으로 처벌하도록 판결했으며, 일본은 이 판결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1951년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음. 이나다 정조회장의 발언은 자민당 총재(아베 총리) 직속 조직인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가 최근에 시작한 역사 검증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위안부 할머니 2명 내일 일본방문...한일 합의 무효 주장(1/24, 연합뉴스)
- 지난해 말 한일 간에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자신들이 겪은 참상을 알리기 위해 첫 해외 증언활동에 나설 예정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는 25일 오전 9시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 일본 도쿄로 출국함.
 - 할머니들은 26일 오전 10시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 제1면회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오후 2시 중의원회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한일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피해 참상을 증언할 예정임.

- 두 할머니는 지난 13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 피해당사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요구했던 진상 규명 등 조치가 무시된 이번 한일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함. 일본 정부에도 ‘위안부’에 대한 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촉구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미중 당국자 中경제 의견교환…경기부양 기대 ‘솔솔’(1/20, 연합뉴스)
 - 20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류허(劉鶴)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지난 18일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의 중국 위안화 환율, 연초 중국 증시 폭락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음.
 - 루 장관은 류 주임에게 소득 제고 및 소비 확대를 통한 성장 모델 전환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경제구조 개편을 적절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음. 아울러 양측 인사는 시장과의 소통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추진 과정에서 시장에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함.
 - 미중 고위인사의 전화통화가 성사된 배경은 최근 중국 증시와 위안화 환율이 연초부터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중국의 2015년 경제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경기부양 기대감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됨.
- 美싱크탱크, 미국, 亞에 군사력 증강해야…中굴기·북핵 위협(1/20, 연합뉴스)
 -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2025 : 능력, 실재,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도전받고 있다고 설명했음.
 - CSIS는 중국과 북한이 일상적으로 미국의 안보 신뢰성에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능력을 고려할 때 아태지역 군사력 균형은 미국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함.

- CSIS는 이에 미국이 힘의 재균형을 이루려면 강력한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괌 기지에 배치된 핵공격 잠수함을 현재 4대에서 6대로 늘리고 개선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함.
- 블링컨, 중국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대북제재 더 강화(1/2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한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 출국에 앞서 NYT 기자와 서울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음. 블링컨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제재 측면에서나 방어 태세 측면에서나 모두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를 활용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이러한 조치들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미비확산차관보 中, 대북 전략물품 거래 감시·통제 강화해야(1/21, 연합뉴스)
 -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1일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이나 장비가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힘.
 -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날 주요국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 회견)에서 “북한이나 이란이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첨단기술이나 장비 구입을 추구할 때 그들이 구매를 선호하는 것은 중국”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함.
 - 그는 “중국은 첨단 경제이고 많은 선진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중국이 북한과 이란과의 전략적 품목 거래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中군사령관, 남중국해 위협 늘어나면 인공섬 ‘방어시설’ 확대(1/21, 연합뉴스)
 - 우성리(吳勝利)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위협을 받으면 현지의 인공섬 방어시설을 확대 구축할 방침임을 시사 함.

-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 사령관은 전날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 화상 통화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화할 목적은 없지만 방어시설을 결코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중국해 인공섬에 방어시설을 얼마나 설치할지는 중국이 위협받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미중 양국 해군은 실질적인 우호교류활동을 통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고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함. 그러나 미국 해군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자유롭게 비행과 항해를 할 것이라고 밝혀 남중국해 갈등이 여전히 지속될 것임을 예고함.
- **美 블링컨, 맥빠진 방중…중외교사령탑은 중동 출장중(1/21, 연합뉴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 미 고위당국자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지만, 대북제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접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1일 중국 외교부와 주중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과 올해 예정된 미중 전략대화 사전회의를 공동 주최함.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블링컨 부장관과 장 부부장은 중미 전략대화 사전회의를 주최하고 중미 관계와 공통으로 관심이 있는 전략안전, 종합적 안전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블링컨 부장관의 방중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외교안보 사령탑’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을 이끌고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뤄져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유엔주재 미국 대사, 대북 제재, 중국과 합의 접근 못했다(1/24, 연합뉴스)**
 -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두고 미국이 추진 중인 제재안과 관련해 아직 중국과 합의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23일(현지시간) 밝힘.
 - 아프리카 부룬디를 거쳐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접근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아니다.”라고만 언급함. 이와 관련, 몇몇 유엔 외교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데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큰 장애가 될 것이라 전망함.

- 한편, 최근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에 대북 석유 수출 및 북한산 무연탄 수입 금지 등 초고강도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美, 대북 위안화결제 제한 위안화계좌 동결 中에 요구<교도>(1/24,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과 관련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제한할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오바마 정권은 ‘북한에 고통을 주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대북 위안화 결제 제한과 함께 중국 내 항만, 공항 등에서 대북 무역 관리를 강화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교도는 전함.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답변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짐. 미국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때 이 같은 방안을 재차 거론할 것으로 보임.

바. 미·일 관계

- 아베, 북핵실험 중대 위협…미일 협력해 엄중대응해야(1/2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다.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그는 이날 방일 중인 제임스 쉰센브레너 미국 하원의원(공화당) 등 미일국회 의원회 소속 미국 측 의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힘.
 - 아베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일미동맹의 강력함을 확실히 보여 줬다.”고 강조했고, 쉰센브레너 의원은 “총리의 정세 판단이 정확하다.”고 답했음.
- 미, 북핵·남중국해 갈등 대응 위해 공군 1천여 명·항공기 증파(1/24, 연합뉴스)
 - 미국 행정부는 최근 남중국해 갈등, 북한에 대한 위력 과시를 위해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CVN-74, 만재 배수량 10만 3천t) 전단의 동아시아 파견을 결정한 데 이어 유사시 신속한 전력 전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요코다(横田) 주일 공군기지에 1천100여 명의 미군 병력과 최신형 C-130J 대형 수송기와 특수전용 C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의 증강 배치를 결정함.
 - 19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미국은 요코다 기지에 배치된 제5공군 산하 제374 항공수송단의 구형 C-130 수송기 14대를 C-130J ‘슈퍼 허큘리스’ 기종으로 교체하고, C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10대도 새로 배치할 계획임.

- 이에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하와이) 부설 태평양 포럼의 랠프 코사 대표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화력 투사와 병력 배치에 항공수송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 제347 항공수송단의 더글러스 드라메터 단장(대령)도 “이번 결정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관련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군사 외교적 관계에 더욱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함.

■ 미군·자위대 4년전 센카쿠유사시 작전계획 연구안 마련(1/24, 연합뉴스)

- 미군과 자위대가 일본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 작전 연구안(案)을 만들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함.
- 주일미군사령부 간부들과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작성한 ‘연구안’은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를 중국 무장세력이 점령하는 사태를 상정, 4단계 작전 계획을 담았음.
- 연구안에 의하면, 1단계로 자위대와 미군은 무장세력의 센카쿠 상륙을 막기 위해 함정, 항공기 등으로 주변 경비를 강화함. 또 소규모 무장세력이 상륙한 뒤를 상정한 2단계에 자위대와 미군은 상대의 증원 부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함으로써 상대의 보급을 끊게 됨. 또 3단계에는 상륙한 무장세력에 대해 미일 양측이 대포와 공중 폭격 등으로 총공격하고 마지막 4단계에 미일 부대가 상륙해 탈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안은 자위대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미군은 ‘적절히 협력한다.’는 전제로 작성됐다고 아사히는 소개함.

사. 미·러 관계

■ 미·러, 시리아사태 이견 절충 실패…평화회담 좌초위기(1/21,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회담 개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고 블룸버그통신, CNN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방안을 놓고 3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유엔 중재의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반군 측을 누가 대표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음. 또 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5년 동안 지속한 시리아

내전에서 어떤 반군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자 스테판 드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는 25일 예정됐던 시리아 평화회담이 연기될 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미국-러시아, 시리아 북동부서 군 공항 건설 경쟁(1/23,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에서 각각 군 공항 건설에 나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미국은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가 장악한 폐활주로를 최근 2배로 늘렸고, 러시아는 정부군과 YPG가 분할 점령한 지역의 국제공항에 병력을 보내 공군기지로 전환할 것이란 추측이 나왔음. 시리아 공습에 나선 양국은 주요 공격 지역이 달라 충돌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터키와 접경한 북동부로 진출하면서 미-러 간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러시아는 또 '이슬람국가(IS)' 격퇴 전에 앞장선 YPG를 지원하는 경쟁도 벌이고 있음. 이는 YPG를 테러조직으로 보는 터키의 반발을 불러 IS 격퇴전은 물론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아. 중·일 관계

■ 日언론,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이달 개최 검토(1/19,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각료급 인사들이 참가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이달 중 도쿄(東京)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전함.
- 양국 간 고위급 경제대화는 2010년 8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이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및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되었음.
- 고위급 경제대화에는 중국에서는 부총리급 인사와 왕이(王毅) 외교부장,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 등이, 일본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경제산업장 등이 참가할 예정임. 양측은 중국의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정에 대한 공동 대응,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협력,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짐.

- 중일 당국자, 베이징서 北핵실험 대응 논의(1/22,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당국자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하고 북한의 핵 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했다고 밝힘. 중국 외교부도 이들이 회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음.
 - 상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한 대응 수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됨.

- 일본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중국견제용'이 3분의 2...비율상승(1/23,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가 최근 중국 항공기를 견제하기 위해 긴급 발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23일 파악됨.
 -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합참에 해당)가 전날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작년 4~12월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567차례 긴급 발진했고, 이 가운데 약 65.8%인 373건이 중국 항공기를 견제하기 위한 출동이었음.
 - 2014년 4~12월에는 모두 744차례 긴급 발진했는데 중국 항공기 견제용 출동은 371건(약 49.9%)이었고, 중국 항공기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발진 횟수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긴급 발진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짐.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아베·푸틴, 북 핵실험 대응 안보리서 연대 합의(1/22,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연대하기로 22일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전화 회담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또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비공식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기로 함.
 -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도쿄에서 외무 차관급 인사 협의를 열 계획으로 전해짐.
- 일본, 러시아 외교에 공들이기…아베, 봄에 방문키로 합의(1/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쿠릴 4개 섬(북방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대사직을 신설하는 등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현안을 풀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음.
 -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각의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대표 일러 관계 담당대사’를 신설하고 이 자리에 하라다 지카히토(原田親仁) 전 러시아 대사를 임명함. 그는 러시아와 일본이 2차 대전 후 맺지 못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나 고위급 협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를 함께 다룰 전망이다.
 - 일본 정부가 각국 주재 대사 외에 특정 국가와의 교섭을 담당하는 대사를 신설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아베 총리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올해 봄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합의함.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건설노동자들 혹한 속 노역에 시달려(1/20,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일하고 있는 ‘백두산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의 모습을 방영하며 “영웅적 기상이 나래치는 혁신의 건설장”이라는 선전을 요란하게 펼쳤음.
 - 그러나 현지 소식통들은 마치 일제시대 징용에 끌려 나간 우리 민족의 노예 노동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며 중앙텔레비죤의 보도 내용을 비판했음.
 - 이처럼 무리한 건설이 북한에서도 제일 추운 영하 북부 고산지대에서 진행되고 있어 현지 건설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18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5월에 있을 7차당대회 전으로 어랑천 2호부터 4호 발전소까지 완공을 해야 한다”며 “어랑천 2호발전소와 3호, 4호 발전소 언제(댐)를 완공하기 위해 6만 명의 주민들이 동원됐다”고 밝혔음.
 - 어랑천 2호발전소는 발전용량이 3만kw이고 나머지 3호와 4호는 각각 1만kw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 2007년에 완공된 어랑천 1호발전소는 발전용량이 6만kw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2만kw에도 못 미치는 전기를 생산해 내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지난해부터 시작한 ‘평소발전소’ 언제건설을 당대회 전으로 무조건 끝내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다”며 “중앙의 무리한 건설지시로 하여 최근 혹한 속에서 돌격대원들 수백 명이 동상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 ‘평소발전소’는 2009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자체로 건설한 8백kw 용량의 수력발전소로 원래 이름은 ‘홍암청년발전소’였다고 하며 이 발전소는 저수지가 없는 수로식 발전소여서 그동안 제대로 가동을 못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그러나 지난해 함경북도 청년동맹이 수로식인 ‘홍암청년발전소’에 언제(댐)를 쌓아 저수식으로 개조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평소발전소’로 바꾸었다고 그는 말했다.

- “북 해외연수인력 현지적응 못 해”(1/20,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의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유럽의 선진 의료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에 연수생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지 못해 교육관계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은 2001년부터 독일의사협회와 협력으로 평양의학대학과 조선적십자병원 의사인력 10여명을 6개월 단위로 독일에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정부도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부터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북한 의료진의 독일 연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독일 현지에 파견된 북한 연수생들은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현지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기술을 배워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북한 연수생들의 수준을 문제로 꼽았다.
 - 또 일부 연수생들은 현지 의사들보다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퇴근도 빨리 하는 등 정해진 일과를 준수하지 않아 현지인들이 실망을 사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 소식통은 “북한 연수원들은 기술연수와는 상관이 없는 체제 선전을 늘어놓는가 하면 뭔가 자꾸 공짜로 얻어가려는 습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 이 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서 그런지 대충 일하는 습관이 몸에 뱀다”면서 “동서독 통일 때도 서독 의사들은 동독 사람들의 몸에 뱀 집단주의 근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감정불화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자본주의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에 더 많은 해외 연수생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은 체제 들어 시동을 건 경제개혁 조치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에서 연수를 받는 북한인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프랑스 AFP 통신, 올해 평양에 지국 개설(1/20, 미국의소리)
 - ‘AFP 통신’은 19일 성명을 통해 올해 평양에 지국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 ‘AFP’는 엠마누엘 어그 회장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림호룡 부사장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평양지국 개설 계약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지국 개설 시기는 올해 중반이며 ‘AFP 통신’은 사진과 비디오, 기사를 평양에서 송고할 예정이다.
 - 어그 회장은 서명 뒤 “평양지국 개설이 ‘AFP’의 국제 연결망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미국의 뉴스통신사인 ‘AP 통신’이 지난 2012년 1월에 평양지국을 개설했으며, ‘AFP 통신’은 성명에서 ‘AP통신’과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얼마 되지 않는 평양의 외신 매체들에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평양에는 러시아 관영언론(‘이타르타스’와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 공동)도 지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AFP’는 평양지국에 아시아 지역총국의 관리를 받는 북한 직원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특파원들을 정기적으로 평양에 보내 취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AFP’가 북한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취재보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음.
 - 국제 언론기준과 비교하기 힘든 북한의 엄격한 검열과 제한적인 취재환경 때문에 언론의 객관적,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폐쇄적인 북한사회를 보다 개방적으로 외부에 소개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공존하는 것임.
 - 이 매체는 ‘AP 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교환한 지국 개설 합의 초안과 ‘AP’ 전 현직 직원 14 명과의 인터뷰 결과를 전하며, ‘AP’ 평양지국이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원칙을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중앙통신’이 ‘AP 통신’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며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주장임.
 - 이에 대해 ‘AP 통신’은 터무니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평양지국은 북한 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으며, 기사 작성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북, 제재국면 속 노동자 중국 파견 지속(1/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해외근로자 파견 상황에 밝은 중국의 북한 소식통은 1월 21일 “약 열흘 전에 1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일하러 나왔다”면서 “이들은 현재 한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소식통은 “보안상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이나 공장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노동자들을 인솔하고 나온 북한 간부는 몇 년 전에도 중국을 드나들며 인력 송출에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 북한 노동자의 중국 입국은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현재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인력 파견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은 취업비자가 아니라 공무여권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이들은 공장에 집단 합숙하면서 외부 출입을 일절 못한다”고 언급했음.
 - 북중 간 비자협정에 따라 공무여권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중국에 체류할 수 있음.
 - 북한은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우선 노동자들을 공무여권으로 중국에 입국 시킨 뒤, 중국 업자들과 짜고 공장에 합숙시키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노동자들은 비자만료가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북한에 잠깐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심양의 또 다른 소식통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국 정부도 경계하기 때문에 북한도 노동자들의 취업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 이른바 ‘개미군단’이라고 부르는 북한 해외 인력이 1인당 300달러씩만 벌어도 바쳐도 1년 동안 당국이 벌어들이는 돈은 무시할 수 없다고 그는 언급했음.
 - 그는 “현재 북중 국경지방에서 이뤄지는 밀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북한의 자금 줄을 죄기 위해서는 해외 인력 파견에 빚장을 질러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 정부가 북한 근로자들의 위장 취업 문제만 제대로 검열해도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은행 ‘북한 여성, 고위직 진출 비율 낮아’(1/21,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2016 성 평등 자료집’에서 2013년 기준으로 북한 여성들의 의회 진출 비율은 16%라고 밝혔음.
 - 남녀 의회 대의원 10명 가운데 여성이 채 2명이 안 된다는 의미임.
 - 북한은 정부 관리직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도 6%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 항목과 관련해 세계 평균은 18%를 기록했고 미국은 26%, 그리고 중국은 12%였음.

- 2013년 자료를 근거로 한 세계은행의 ‘2016 성 평등 자료집’은 북한을 저소득 국가로 분류했음.
- 자료집에 따르면 북한의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은 1천 명 당 여성은 22명, 남성은 28명이었고,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이 73세, 남성은 66세였음.
- 북한에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여성이 72%, 남성이 84%였음.

2. 북한인권

- “유엔 내 인권메커니즘 적극 활용해야”(1/18, 대한변협신문)
 - 대한변협이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를 초청해 ‘북한인권논의 동향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 지난 13일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게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했음.
 - 김태훈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 제네바 대사를 초청해 유엔의 북한인권 논의동향을 짚어보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유엔에는 주요 인권협약에 따른 협약 이행제고를 위한 10개의 인권협약기구가 있고, 55개의 특별절차에 독립된 전문가를 두어 인권상황에 대해 국가별, 주제별로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케 하고 있음.
 - 최 전 대사는 “한국은 8개 협약기구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해당 기구에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심의 받고 있다”며 “2013년에는 6개의 특별절차 전문가를 양산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 유엔 총회 보조기관의 하나인 인권이사회는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해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로, 2013년 22차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했고, 작년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는 “북한에서 광범위하며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오고 있다”고 결론짓고, 북한에는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혁 및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국제사회에는 후속조치로 담당 조직 설치할 것 등을 권고했음.

- 아울러 “북한당국이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반인도적범죄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보호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음.
 - 최 전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는 이사회에서 스탠딩 어젠다로 고려되진 않지만 조치가 필요한 항목에 항상 포함돼 있는 주제다”라며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작년에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라고 말했음.
 - 최 전 대사는 “한국 NGO의 유엔 인권메커니즘 참여시에는 활동 임무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활동실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고 서면 구두 발언 기회 및 북한인권 관련 사이드이벤트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국내 NGO 단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행동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음.
- 유엔 北인권보고관 “납치는 범죄, 북한책임 추궁해야”(1/19, 뉴스시)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도쿄를 방문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납치는 범죄다.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1월 18일 말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도쿄(東京)를 방문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을 만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가토 담당상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닫지 않겠지만, 다루스만 보고관을 비롯한 유엔과 제휴해 모든 납북자가 하루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싶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힘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음.
 - 이에 대해 다루스만 보고관은 “국제사회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납치 문제에 몰두하는 분위기며, 북한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국면에 들어왔다”면서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또한 가토 담당상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등 관계국과 제휴를 통해 납치 및 핵미사일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음.

- 차기 유엔 북 인권특별보고관 여성 유력(1/19, 자유아시아방송)
 - 오는 7월로 임기가 끝나는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뒤를 이을 차기 보고관으로 여성이 점쳐지고 있음.
 - 북한 인권 문제에 정통한 유엔의 한 소식통은 1월 18일 “다르스만 후임으로 여성, 그것도 동아시아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도 “차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여성이 물망에 올라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 2004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비딧 문타폰 초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이어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다르스만 보고관은 특별인권보고관의 임기가 최대 6년을 넘길 수 없다는 유엔 규정에 의해 올해 7월로 임기를 마치게 됨.
 - 한편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뿐 아니라 차기 사무총장으로도 여성 후보 탄생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음.
 - 지난 70년 간 8명의 남성 사무총장을 배출한 유엔에서 차기 여성 사무총장으로 손꼽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리나 보코바 현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보코바 사무총장은 작년 5월 반기문 사무총장의 러시아 방문 때 동행한 인물이기도 함.

- 인도인도 北인권법제정 촉구…인권법 제정 ‘사진전’ 열려(1/21, 데일리NK)
 -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 2016’이 1월 20일 인사동 통인 갤러리에서 열렸음.
 - 그동안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전시회는 개최된 적이 있었으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북한인권 문제와 북한인권법에 무심한 국민들을 일깨워 북한인권법을 널리 알리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음.
 - 갤러리에는 캠페인 참여자들의 모자이크 초대형 사진 1점과 캠페인의 기록 및 참여자들의 대형 사진 34점, 소형 사진들이 전시됐음.
 - 이번에 전시된 사진에는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동아일보 본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100일 캠페인’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음.
 -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새누리당 위원,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전시됐으며, 이외에도 변호사, 기자, 교수, 일반국민, 외국인 관광객의 사진들도 다채롭게 전시됐음.

- 특히 눈이 머리에 잔뜩 쌓인 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도인 페헤브(Feheb)씨의 사진과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부부의 사진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음.
- 주최 측 인지연 대표는 “이번 사진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루어낸 것이고, 이 사진전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사동 한 가운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음.
- 이어 “제19대 국회는 4월 총선준비를 이유로 북한인권법을 영영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이루지 못 한다면 제19대 국회는 북한 주민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 오명을 쓰지 말 것을 국회에 고한다”고 일갈했음.

■ 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1/23, 연합뉴스)

- 여야 원내지도부는 1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여야 간에 의견이 맞았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음.
-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음.
-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연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원샷법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음.
- 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음.
- 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 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천338일만에 빛을 보게 됨.

-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내용임.

3. 탈북자

- 특이동향 없음.

4. 이산가족

- 정부 “엄중한 정세에도 이산가족 문제 노력 지속”(1/20, 연합뉴스)
 - 정부는 2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지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이산가족 관련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이산가족은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라며 “지금 엄중한 정세가 조성돼 있지만,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 정 대변인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이나 유전자 검사 그리고 유전자 DB 구축, 또 국제사회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 나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북측에 추가 제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 정 대변인은 북한 김영철이 작년 말 사망한 김양건의 후임으로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정보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충분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 NGO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돼야(1/1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대북제재강화법안에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음.
 -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대북제재 강화법안(H.R.757)을 채택했음.
 - 북한의 돈줄 차단을 위한 대북 금융제재 강화가 핵심 내용이지만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의 대외 원조를 금지토록 하는 등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하원이 채택한 대북제재법안이 정상적인 대북지원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1월 19일 말했음.
 - 이 관계자는 하원의 법안과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법안이 인도주의 대북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의약품 등 지원품목이 대폭 제한되고 지원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보내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했음.
 - 머시코, 월드비전, 글로벌 리소스, 사마리탄스 퍼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미국의 5대 대북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대북제재강화법안의 최종안에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의회 관계자에 대한 설득 작업 등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단체들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미국 의회에 전달해 달라는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 단체명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대북 지원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국제 제재로 대북 인도지원 어려워”(1/20, 자유아시아방송)
 - 전 세계 국가들의 인도주의 상황과 필요를 평가하는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20일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했음.
 - 이 기구는 최근 낸 ‘국제 위기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 ACAPS는 “(이는) 특히 은행 창구가 막혀 지원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ACAPS는 또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다시 한 번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 제재로 인한 인도주의 지원에의 직접적인 영향을 시사했음.
 - ACAPS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하려 해도, 지원 대상 마을에 대한 접근성, 지원에 대한 평가 과정, 그리고 분배 감시 등에 당국의 제한이 심해 대북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이 밖에도 이 기구는 식량 가격, 재고 식량 여부 등 식량 안보, 영유아 사망률 등 보건과 관련한 인도주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원활한 대북 지원을 막고 있다고 분석했음.
 - ‘국제 위기 평가’ 보고서는 지난 6개월간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이 들어온 국가들의 식량 사정, 안보, 정치, 인권 상황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있음.

- 독 NGO, 북한 농축산 통합운영 지원(1/21,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FiBL/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의 독일 지국은 평양 근처 축산 농장에서 새로운 지원 사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3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국의 북한 지원 책임자인 루카스 바움가르트 연구원은 21일 유기농연구소와 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할 시범농장에서 ‘농축산 통합을 통한 영양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진행했던 ‘유기물을 이용한 곡물재배’ 사업에 이어지는 농업 기술 지원임.

- 유기농연구소 측은 약 11만 달러가 든다면서 유럽연합 국제개발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북한에서 생산되는 사료와 자재를 이용해 가축을 먹이고 축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 바움가르트 연구원은 평양 인근에 가축들이 먹이를 먹거나, 자거나 이동하기에 알맞은 축사를 지어서 적은 투자로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한 공동 연구를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암소 16마리와 어린 암소 4마리로 사육을 시작했으며 유기농연구소가 과거 북한에서 진행한 유기농법 지원을 축산업에 접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영 NGO, 5년째 대북 환경·식량지원(1/22,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본부를 둔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경남도 영광군과 신포군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을 5년째 이어가고 있음.
 - 세이브 더 칠드런의 엠마 폼프렛 대변인은 식수 시설 개선과 하수도 설치, 의료 지원 등 통합환경보건과 식량 지원의 두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유럽연합 6개 사업 중 제2 지원 사업에 참여한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1년 3월부터 함경남도의 3개 시 군과 21개 리 지역에서 22개 보건소와 6개 병원의 시설 개선을 주도하고 있음.
 - 폼프렛 대변인은 영광군과 신포군을 중심으로 약 4만 9천 가정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식수관을 연결했고 하수처리와 환경보건과 관련한 교육, 홍보활동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세이브 더 칠드런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은 김장용 배추 등 채소를 온실에서 재배해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나누어 주는 어린이 영양 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폼프렛 대변인은 평양채소연구소와 협력하여 시범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함흥시에 36개 온실을 지어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채소를 재배하는 등 5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지원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6개 비정부기구를 두고 이 단체들을 통해 북한 전역에서 농업과 의료,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지원 개발 사업을 해왔음.

- 2010년까지 유럽의 비정부기구와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1차 북한 지원에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천만 유로 즉 미화 약 2천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2차 북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2016년까지 3차 지원 사업으로 연장됐음.
- 세계기금, 북 결핵 사업에 2800만 불(1/22,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기금은 1월 22일에 2018년 6월까지 2천 840만 달러를 투자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음.
 - 세계기금이 투자한 예산으로 유엔아동기금이 북한 현지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 양성반응 환자들을 진단 치료하고, 현미경, 시약, 치료약 등을 제공하게 됨.
 - 한편, 세계기금은 지난해 북한에서 펼친 대북 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세계 기금은 2012년부터 2015년간 진행된 ‘결핵 사업 제 1단계’와 관련해 북한 내 수혜자와 북한 관계자들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음.
 - 북한 당국이 결핵 퇴치 노력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업 초기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의료시설에 가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8. 북한동향

- 특이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